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의 실업문제와 노동시장정책

김원섭

독일 브레멘대학 박사과정, 사회복지학 전공

표면적으로 보면 독일통일이 가져다 주었던 충격과 희망은 10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독일이 당면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문제들이 여전히 통일과 그 결과 초래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심각성이나 현재성의 측면에서 실업문제는 누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독일의 실업문제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은 유효하다.

이 글에서는 독일통일 후 지금까지의 실업문제와 노동시장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대량실업의 발생원인은 무엇이었나? 어떤 대응조치들이 실시되었으며 어떤 효과들을 확

인할 수 있는가? 이상의 두 가지 장황한 질문에 짧은 대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통일후 실업문제의 발생과 그 원인

노동인구의 변화추이 (수요측면)

1989년 동독의 노동인구는 970만에 달했다. 통일 후 이는 급격히 감소하여 1992년에 약 640만, 1998년에는 약 606만개의 일자리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원래 일자리의 1/3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이 급격한 일자리 감소는 주로 동독지역에서의 탈산업화의 결과인데, 통일 직후 구 동독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농업부문에서 상당히 심각한 생산감소를 경험하였고, 전체적으로 실질국민총생산은 통일 2년 만인 1991년 이미 구동독의 2/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노동력공급의 변화추이 (공급측면)

경제/화폐통합 이후 구동독의 노동력 공급은 1989년의 약 980만에서 1993년의 약 770만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경제생활인구의 1/4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진 것을 말한다.

실업문제

이러한 노동력공급의 감소는 탈산업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여, 실업자수는 1991년 중반까지의 급격한 증가 이후 100만에서 140만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문제는 산업부문별, 사회집단별로 그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조업분야의 실업이 높은 반면 일부 서비스부문(은행, 보험)과 건설부문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 보다 두배나 높았던 점을 볼 때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하게 실업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령자와 미숙련 노동력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2. 대량실업의 원인

구동독지역에서의 실업의 원인은 수요 측면, 즉 탈산업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실업 원인을 둘러싸고 세 가지의 중요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접근방식

뤼버링에 따르면(Luebbing 1993),

구동독의 실업문제 원인은 잘못된 임금 정책에서 찾아져야 한다. 동독의 임금을 서독수준으로 맞추기를 요구했던 노조의 임금정책이 지나친 임금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상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투자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따라서 실업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세금 경감, 적은 임금인상, 사회보장비용의 감소와 같은 대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입장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입장(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1996)에서는 구동독지역에서의 대량실업 원인을 주로 통일조약의 잘못된 결정들과 통일후 풀 정부(기민-자유당 연정)의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서독 화폐간의 1:1 교환비율이 비판의 중심으로 떠오르는데, 구동독화폐의 과대평가 때문에 구동독상품의 가격상승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구동독기업들은 내수시장은 물론 외수시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다른 실책은 신탁청의 잘못된 사유화(privatization) 정책에서 찾아진다. 신탁청은 신속한 사유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소유에서 동독 시민의 참여가능성을 배제하였고, 나아가 아직 팔리지 않은 회사들의 건전화를 등한시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의 해방을 주장했던 콜 정부는 스펀터적인 "창조적 파괴"의 기치 아래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시장경제의 구축이 새로운 경제기적을 낳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필수적이었던 적극적 산업, 구조, 고용 정책 그리고 동독 기업에 유리한 형태의 시한부 시장보호정책이 포기되었고, 단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만이 통일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와 노동력의 재교육을 위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서독과 서유럽기업의 시장진출과 구 동독 기업들의 내수/외수시장에서의 퇴출은 이러한 적극적 경제정책이 결여된 결과이며, 이것의 자연적인 귀결이 구 동독지역의 탈산업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 동독지역 고용의 발전전략의 수립을 제안하는데, 이는 고유한 지역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산업정책, 구 동독산업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보호주의, 현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자지향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분절론에 근거한 원인규명

그뤼너어트와 루츠(Gruenert/Lutz 1996)에 따르면, 동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역시 대량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구 동독의 기업과 콤비나트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징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구 동독에서는 고용보장이

당연시 되어 있었고, 기업복지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생활의 근거였으며(주택, 탁아, 의료혜택, 양로원 등등),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은 언제나 기업과의 연계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통일후 노동시장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먼저 통일 후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는데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부족은 그 자체로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 힘든 문제였다. 두번째로 아직 남아있던 일자리의 대부분은 그 기업의 기존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졌다. 따라서 한번 이전의 일자리를 잃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고용기회를 찾기는 아주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실시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은 구조변동시 기업과 직업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치들이었는데, 강하게 내부화된 구 동독의 노동시장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대량실업의 원인은 이들 세입장들이 제시하는 요인들의 복합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중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구 동독경제발전에서의 노동비용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고 있고, 또한 이를 차치하더라도 구 동독지역에서만 낮은 임금은 현실적으로도 아래의 이유 때문에 관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첫째,

낮은 임금이 지급되면 독일의 현재 사회 보장체제에서는 부수적으로 사회부조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다 많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동독지역에서만 낮은 임금은 구동독의 고급노동력의 서독으로의 이주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는 빠른 통일과정에서 폭발적으로 표현된 구동독주민들의 “자본주의적 부”의 향유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볼때 정치심리적으 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구동독지역의 대량실업의 원인은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쾰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구동독 노동시장의 특징에서 우선 찾아져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전략으로서 충격요법(창조적 파괴)의 배경에는 구동독(체제)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서독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 구동독체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초기단계에서 경제체제의 직용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완전한 이행기가 극도로 짧아지게 되었다. 또한 서독기업으로의 동독기업 개각을 통한 사유화를 추진했던 신탁청의 전략은 동독경제의 서독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결과가 대량실업을 직접 초래한 구동독지역의 탈산업화였다. 그 외에도 동독노동시장의 내부노동시장적인 성격은 빠른 고용구조의 변화를 방해하

여 실업을 증가시킨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3. 구동독지역에서의 노동시장정책

1) 노동시장정책의 과제

구동독지역에서의 노동시장정책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째가 소방서 기능이다. 단축노동자수당과 조기퇴직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는 소방서 기능은 주민들의 동요와 대량이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는 다리 기능이다. 다리 기능은 말 그대로 전환교육, 심화교육, 그리고 고용창출조치등을 통해 체제이행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부자를 통한 고용효과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극복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실업감소 기능이다.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 노동시장정책 조치들

① 단축노동자수당

단축노동자수당은 원래 기업이 경기적 요인으로 더이상 기존 노동자 전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 조업감축이 기본적으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일 때 지급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는 이 전통적인 경기조절정책적인 기능에 구조정책적인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조업감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이어도 단축노동자수당이 지급되었고 단축노동자수당을 받으면서 직업향상교육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 특별조치로 단축노동자수당은 구동동지역에서 널리 실시될 수 있었는데 1990년 6월에는 이 조치의 수혜자가 200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노동촉진법이 구동동지역에 확대적용되면서 이 특별조치에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 결과 1991년 말과 1992년 초 사이에 수혜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단지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¹⁾, 이는 급속한 실업율의 상승을 유발하였다.

② 직업능력개발조치

직업능력개발조치는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조치이다. 노동촉진법에는 세가지의 직업능력개발조치가 있다. 심화교육(Fortbildung), 전환교육(Umschulung), 그리고 직업적응교육(Einarbeitung)이 그것이다. 구동동지역에서의 직업능력개발조치의 목적은 시장경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습득시키고, 이행기에 과도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를 새로운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할 때까지 흡수하여 실업증가를 억제하는데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구동동의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특정한 기업과의 연계 하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통일 직후에는 구동동지역의 실업자의 참가가 많았지만 점차 참가자수가 늘어서 1991년과 1992년에는 그 수가 각각 약 90만명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노동촉진법의 열번째 개정으로(1993년부터 실효) 이 조치들은 결정적으로 제한되게 되는데 이 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참가조건이 엄격해지고 교육수료후 계속해서 다른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또한 적용교육수당도 수혜액이 낮춰지고 혜택기간이 줄어들었다.

③ 고용창출조치

고용창출조치는 실업자의 직업능력의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조치이다. 구동동지역에서 고용창출조치는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에서 이 조치로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문제집단을 위한 고용기회를 창출한다. 고용정책적 관점에서 일자리공급을 늘이고 실업을 줄인다.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실업자를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 상황을 개

1) 노동촉진법의 구동동지역으로 확대적용으로 단축노동수당의 규정에 크기는 세 가지 수위가 개편된다. 첫째, 조립의 적용에 건설은행 그리고 보험부문이 제외되었다. 둘째, 단축노동자수당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기업측의 기여금이 더이상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단축노동수당의 집단적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선한다.

1992년 5월 약 405,000명의 실업자가 이 조치에 참가하여 가장 높은 참가자수를 보였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심하게 위축되었다. 구동독지역을 위한 특별조항들을 통해 이 지역에서는 100% 임금보전수당을 받기가 용이하였고 1991년과 1992년에는 "공동과제 동독"(Gemeinschaftswerkes Ost)(자세한 것은 Heinelt/Weck 1998:18-21 참고)의 재원에서 부수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 특별조항들은 1992년까지로 시효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 특별조항의 시효가 끝난 1993년 이후에는 노동촉진법 안에 구동독지역을 위한 특별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이것이 노동촉진법 249h조이다. 이 조항은 환경, 사회사업, 청소년보호 분야에서 고용창출조치가 실시될 때 평균적인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지급액수준의 임금보전수당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조항

의 도입을 통해 대규모 고용창출조치(Mega-ABM)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환경분야에서만 약 3만명의 고용창출 조치가 진행되었다.

1992년 10월에는 투자장에 제거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약이 맺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염된 대지의 정리를 위임하게 되어있었다. 이때 정부는 노동촉진법 249h에 의해 지원되는 기업에 맡겼는데 이는 이 조치의 안정적인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4. 노동시장정책 조치들의 효과와 한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시장정책이 어느 정도 실업을 완화시켰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양적인 실업경감효과가 먼저 조사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조치들의 질적인 측면, 즉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는가

[표 1] 구동독 지역에서 노동시장정책조치의 실업경감효과

년도	실업자수(천)	실업률(%)	경감된 실업자수(천)	예상 실업률*(%)
1991	913	10.3	1881	31.5
1992	1170	16.1	1980	43.3
1993	1149	15.8	1647	18.4
1994	1142	16.0	1313	34.3
1995	1047	14.9	1065	30.0
1996	1169	16.7	847	18.8
1997	1384	19.5	741	30.0

* 조치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실업률

출처: ANBA 1990~1997

를 보기 위해서는 조치들에 참가한 후 어느 정도의 참가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가 조사되어야 한다. 우선 아래 [표 1]은 노동시장조치의 양적인 실업경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이 조치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조치들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구동독지역의 실업율은 1992년에 16.1%가 아니고 무려 43.3%에, 그리고 1997년에 19.5%가 아니고 30%에 이르렀을 것이다. 질적으로 보았을 때도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고용창출조치 참가자의 거의 절반이, 직업능력개발조치의 참가자의 44%가 이 조치 후 일자리를 얻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의 조치들은 경제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창출조치들 중 대규모 고용창출조치들(Mega-ABM-Manahmen)과 노동촉진법 294h의 조치들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의 제 주체 즉 지방정부,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역 경제구조의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정책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이 조치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지적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노동시장정책의

재정구조에서 비롯된다.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은 주로 노동자와 기업의 기여금으로 충당되는데 구동독지역에서의 조치들의 확대는 결국에는 서독지역의 노동자와 기업의 기여금 압박을 가져왔고, 이는 서독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입감소와 기업의 노동비용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둘째, 여러가지 구동독지역을 위한 특별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조치들은 공공사업 분야(Printip der Gemeinnutzlichkeit)와 기존의 사적 시장경제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부가적인 사업분야(Prinzip der Zusaetzlichkeit)에 제한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5. 결론

통일 후 독일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대량실업문제는 단순히 체제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기보다는 많은 부분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기민당-자유당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통일 초기단계에서 경제체제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점진적 이행기의 결여, 동독기업의 서독기업에 따른 매각을 통한 사유화에 집착하여 기존 기업의 재개조를 통한 전환화를 포기한 신탁청의 전략 및 노동시장정책을 제외한 적극적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의 결여, 그리고 동독노동시

장의 내부노동시장적인 성격을 간과한 노동시장정책은 이행기 구동독지역의 고용구조의 붕괴를 가져왔던 중요한 요인 들어있다.

이러한 적극적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부재로 실업문제 해결은 거의 홀로 노동시장정책의 과제로 떠맡겨졌다. 구동독 상황에 투입된 여러 특별 조치들은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도구인 단축노동자 수당, 직업능력 개발조치, 고용창출조치들의 투입가능성을 늘릴 만큼 증가시켰고,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들은 괄목할 만한 고용효과와 경제구조개선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노동시장정책 조치들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는 구동독지역에서의 실업문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체제이행 이후 그 지역에서의 자생적 경제발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독일정부에 의해 기대되었고 장담되었던 2~3년 안의 새로운 경

제기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의 실업률이 폴란드나 체코같은 다른 이행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독일경제로의 급속한 편입과 이에 따라 나타난 이 지역경제의 의존성이 자생적 경제구조의 구축에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체제이행으로 발생하는 대량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장정책은 기본적으로 체제이행에서 유발한 장기적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구조변동에서 발생한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이다. 구동독에서 실시된 광범한 조치의 실행은 실업문제가 단지 일시적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임기응변의 결과였고, 이 예상이 빗나갔을 때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정책, 고용정책, 산업구조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NBA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uer Arbeit), Nuerberg (Verschiedene Ausgaben).
-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1996, Memorandum 96, PapyRossa Verlag, Bremen.
- Christian ... 1997, Arbeitsmarktentwicklung und aktive Arbeitsmarktpolitik im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 Berlin, Brinkmann.

mationsprozess, IAB Werkstattbericht Nr. 5/21.2.1997.

Brinkmann, Christian; Mueller, Karin; Wiedemann, Eberhard, 1993, Problemgruppen am ostdeutschen Arbeitsmarkt in: Neubaeumer, Renate (Hrsg.), Arbeitsmarktpolitik kontrovers, Wiss. Buchges., Darmstadt: 176-203.

Dahms, Vera/ Wahse, Juergen, 1996, Zur Erwerbstaetigkeit im Ostdeutschland im Transformationsprozess in: Nickel, Hildegard Maria/ Kuehl, Juergen / Schenk, Sabine (Hrsg.), Erwerbsarbeit und Beschaeftigung im Umbruch, Leske+Budrich, Opladen: 29-54.

Ehlers, Bernd, 1996, Arbeitsmarktpolitik im Transformationsprozess, Edewecht, Stumpf & Kossendey.

Gruenert, Holle/Lutz, Burkart, 1996, Transformationsprozess und Arbeitsmarktsegmentation, in: Nickel, Hildegard Maria/ Kuehl, Juergen / Schenk, Sabine (Hrsg.), Erwerbsarbeit und Beschaeftigung im Umbruch, Leske+Budrich, Opladen: 3-28.

Heinelt, Hubert/Weck, Michael, 1998, Arbeitsmarktpolitik, Vom Vereinigungskonsens zur Standortdebatte, Leske+Budrich, Opladen.

Heinelt, Hubert; Bosch, Gerhard; Reissert, Bernd, 1994, Arbeitsmarktpolitik nach der Vereinigung, Berlin, Sigma.

Jetter, Christoph, 1992, Arbeitsmarktpolitik am Wendepunkt, in: Schmitthenner, Horst (Hrsg.), Zwischen Krise und Solidaritaet, VSA, Hamburg: 29-47.

Kommission fuer Zukunftsfragen der Freistaaten Bayern und Sachsen, 1996, Erwerbstae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n Deutschland, Teil I.

Kuda, Rudolf, 1992, Solidarische Finanzierung der sozialen Einheit in: Schmitthenner, Horst (Hrsg.), Zwischen Krise und Solidaritaet, VSA, Hamburg: 49-54.

Luebbering, Marcus, 1993, Eine staerker marktorientierte Sichtweise des ostdeutschen Arbeitsmarktes in: Neubaeumer, Renate (Hrsg.), Arbeitsmarktpolitik kontrovers, Wiss. Buchges., Darmstadt: 32-60.

Nickel, Hildegard Maria/ Schenk, Sabine (Hrsg.), 1996, Prozesse geschlechtsspezifischer Differenzierung im Erwerbssystem, in: Nickel, Hildegard Maria/ Kuehl, Juergen / Schenk, Sabine (Hrsg.), Erwerbsarbeit und Beschaeftigung im Umbruch, Leske+Budrich, Opladen: 259-282.

Priewe, Jan, 1993, Von der Deindustrialisierung zum wirtschaftlichen Wiederaufbau Ostdeutschlands in: Neubaeumer, Renate (Hrsg.), Arbeitsmarktpolitik kontrovers: 285-299